

“우유의 날을 제정하자”

윤 남 경

(한국유가공협회 기획조사부차장)

“우유의 날”을 제정하자.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우유축제를 벌이자.

우유아가씨도 선발하고,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유글짓기 대회도 개최하고, 우유 많이 마시기와 빨리 마시기 시합도 하고, 우유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경연도 벌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 최대의 우유(팩)와 요구르트·아이스크림도 만들어 참가자들이 나누어 먹고, 우유의 건강증진 학술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우유산업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쉽게 말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국민들이 우유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한마당 우유 큰잔치를 벌여 보자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유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중의 하나가 아니다. 우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포유동물이 태어나서 어미젖으로 생명을 유지, 성장시키듯이 우리 인간도 출생후 일정기간 동안 모유 또는 우유로 신체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젖과 함께 우유는 인간이 최초로 섭취하는 음식물이며, 영양가면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식품인 것이다.

일찌기 영양학자 Mecollum박사는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는 국민만이 경제력이 높은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재상 처칠은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우유음용과 유제품의 소비를 국민영양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우리나라 낙농·유가공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이 지난 62년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서인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건강증진 차원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

원유생산량이 과잉되면 학교급식우유의 공급확대등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모자라면 수요를 억제하는 수급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유지는 WTO개방화가 아니더라도 결코 지속적으로 생산자인 낙농가를 보호하고, 유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릇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분야, 제품이 그렇듯이 생산자의 이익은 끊임없는 수요의 확대와 창출에서 보장된다. 우유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부터 우유 수급정책은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 즉 시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우유소비량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인당 우유소비량은 46.8kg으로 지난 62년에 비해 무려 4백70배나 성장했으며, 이에 따른 전체 우유소비량도 2천6백47톤에 불과하던 것이 2백만톤을 넘어섰다.

짧은 유문화 역사속에서 이 만큼의 신장이 꼭 대견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유가 국민보건과 식량안보의 보루일진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또 만족해서도 안된다. 더욱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백~5백kg에 달하는 서구의 낙농선진국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와 식생활 문화가 비슷한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시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WTO체제 출범에 따른 유제품 시장개방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낙농·유가공산업을 살리는 길은 정말 없는가.

사람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도 지금부터 우유 음용과 유제품의 소비를 국민영양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식생활 중심에 앉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한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우유 한개(2백ml)만 먹는다면 곡류 중심의 식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각종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유제품 수입개방으로 원유가 남아돌까봐 전전공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유가 모자라서 생산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유소비는 단순히, 그리고 무조건 영양가가 높은 완전영양식품이므로 많이먹어야 한다는 식의 이성적 소구로는 더 이상 크게 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매년 15~20%나 급성장하던 우유소비량이 90년대 들어서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그예다.

우유 예찬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설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성에 호소하여 자연스럽게 식생활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식탁에 스며 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유와 친해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며, 그 길이 바로 “우유의날”을 제정하여 우유축제를 벌여야 할 이유인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개별업체수준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우유를 가까이 느낄수 있게 하기위한 노력이나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유가공협회의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공동홍보와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 한국야쿠르트유업의 국제 건강학술심포지엄과 어린이 건강글짓기 대회, 서울우유의 어린이우유대행진, 대학생들이 축제행사의 하나로 열고 있는 건국대 낙농학과의 유제품 페스티벌과 충남대 농과대학의 우유소비 촉진대회등등 각종 행사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우유소비 촉진과 대국민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것은 사실이며, 또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행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행사 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행사를 아울러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우유의 날” 제정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유의 날은 언제로 정할 것이며 이날 행사는 어떻게 치르고, 소요 예산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범국민적인 우유잔치를 벌이는데는 몇몇 개인의 의욕이나 한두개 단체가 주도하기에는 벅차며, 추진하더라도 집안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우유소비 증대는 단순히 낙농·유가공산업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와 부합되는 것이므로 전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관계부처, 관련단체와 업계,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 단체등 각계 전문가들로 “우유의날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우유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가장 큰 날을 선택하여 제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행사의 추진방법과 소요예산의 조달문제등 세부적인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수입개방으로 기로에 선 우리나라 낙농·유가공산업의 재도약과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우유의 날이 제정되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우유축제가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그리고 관련단체와 업계의 관심을 촉구한다.